

농식품부, 농촌공간계획에 '특성화농업지구' 도입

- 2025년 11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(이하 농식품부)는 농업과 농촌의 동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촌특화지구 유형에 '특성화농업지구'를 신설함. 이로써 농촌특화지구 유형은 7개에서 8개로 확대됨.
 - 2024년 3월 「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 이후, 농촌을 포함하는 139개 시·군은 농촌공간을 주거, 산업 등 기능별로 구분하기 위해 농촌공간계획에 따라 '농촌특화지구'를 지정하여 지구 내에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.
- 이번에 신설한 특성화농업지구는 논 타작물 등 특화작물 또는 친환경농업 등 특정 재배방식을 통해 농산물을 지구 단위에서 대규모로 계획·관리하여 맞춤 생산하도록 지정하는 지구임. 이 지구는 친환경농업단지, 논 타작물 재배단지, 농산물전문생산단지 또는 공동영농단지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함.
- 농식품부는 특성화농업지구에 재배단지 조성과 생산·가공·유통시설 지원을 집중하고, 인접 농촌특화지구 (농촌융복합산업지구, 축산지구 등)와의 연계 활성화도 적극 지원할 계획임.
- 한편, 지난 2025년 3월 30일 전북 순창군과 전남 신안군이 농촌특화지구 1차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, 9월 21일에는 강원 횡성군과 전북 장수군이 추가로 선정됨.
 - 전북 순창군 '농촌마을보호지구' 지정 및 인근에 임산물 중심의 '농촌융복합산업지구' 조성 계획
 - 전북 신안군은 유채밭을 활용한 '경관농업지구' 조성 및 인근에 '농촌마을보호지구' 지정 계획
 - 강원 횡성군은 찐빵을 활용한 '농촌융복합산업지구' 및 '농촌마을보호지구' 조성 예정
 - 전북 장수군은 스마트 '축산지구' 및 지역 특산품 중심의 '농촌융복합산업지구' 육성 계획

■ 농촌특화지구 유형 ■

유형	개요
농촌마을보호지구	농촌주민 등의 거주 환경을 보호하고 생활서비스시설의 입지를 촉진하는 등 정주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
농촌산업지구	농촌지역 내 공장, 창고, 제조업소 등 산업시설의 이전·집적화를 유도하거나 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구
축산지구	가축사육 시설, 축산가공 관련 시설 등을 집단화함으로써 축산업을 계획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구
농촌융복합산업지구	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하여 농업생산·제조·가공시설 및 사무 공간 등 서비스 시설을 집약할 필요가 있는 지구
재생에너지지구	에너지원의 환경친화적 전환 등 탄소중립정책에 대응하기 위하여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을 집단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
경관농업지구	동종·유사 작물의 집단화 등 경관형성을 통하여 농촌관광자원 등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구
농업유산지구	세계중요농업유산, 국가중요농업유산 등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무형의 농촌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거나 관리·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
(신설) 특성화농업지구	(성격) 논 타작물 등 특화작물 또는 친환경농업 등 특정 재배방식을 통한 농산물을 지구 단위에서 대규모로 계획·관리하여 맞춤 생산하도록 지정하는 지구 (기대효과) 지역특화작물을 계획적으로 생산하고 유통·소비와의 연계를 강화

*자료: 농림축산식품부('25.11.03), ('25.09.21), ('25.03.30), 「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21065호).



세계 경제 동향

● 미국 제조업 업황 8개월째 위축 | 2025-11-03 미국 공급관리협회

- 2025년 11월 3일 미국 공급관리협회(ISM)는 10월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(PMI)*를 발표함.
 - 10월 제조업 PMI는 48.7로 전월(49.1) 대비 0.4p 하락, 8개월 연속 수축 국면을 이어감.
- *PMI는 구매관리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선행지표임. 50을 기준점으로 50 초과는 경기 확장, 50 미만은 경기 위축을 의미함.
- 생산(Production)지수는 48.2로 전월 대비 2.8p 하락하며 확장에서 위축으로 전환
- 고용(Employment)지수는 46.0으로 전월 대비 0.7p 상승하였으나 9개월 연속 위축이 지속되고 있으며, 응답 기업의 67%는 신규 채용보다 인력 감축 및 충원 보류를 선택함.
- 신규주문(New Orders)지수는 49.4로 전월 대비 0.5p 상승하며, 두 달 연속 위축 국면에 있으나 위축 정도는 완화
- 신규수출주문(New Export Orders)지수는 44.5로 전월 대비 1.5p 상승
- 투입가격(Prices)지수는 58.0으로 전월 대비 3.9p 하락함. 13개월 연속 50을 넘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상승 정도는 완화됨.
- 업종별로 1차금속, 식음료·담배, 수송장비, 플라스틱·고무, 금속가공, 비금속광물 등 6개 산업은 확장세를 보인 반면, 기계, 화학, 전자, 전기장비, 석유·석탄제품 등 12개 산업은 수축 지속
- 제조업 부문은 생산·고용 둔화, 수출 부진, 재고 축소 등이 지속되는 가운데, 신규주문지수 상승은 단기 수요 회복 가능성을 시사함. 원자재 가격 상승세는 완화되었으나 공급망 제약과 미·중 통상 불확실성 등 대외 변수가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.

| 2024년 1월~2025년 10월 미국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 |





국내 경제 동향

● 10월 소비자물가 2.4% 상승 | 2025-11-04 국가데이터처; 한국은행

- 2025년 11월 4일 국가데이터처는 10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.4% 상승하였다고 발표함. 9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상승폭이 확대
 - 지난 9월(2.1%)보다 0.3%p 상승(주간브리프 Vol. 38)
 - 균원물가(식료품·에너지 제외)는 전년 동월 대비 2.2%, 전월 대비 0.4% 각각 상승
 - 생활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.5%, 전월 대비 변동 없음.
- 품목별로는 공업제품(2.3%), 서비스(2.5%), 농축수산물(3.1%), 전기·가스·수도(0.4%) 등 모든 부문에서 물가 상승*이 관찰됨.
 - *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
 - (농축수산물) 채소류 가격 하락(전년 동월 대비 -14.1%)에도 불구하고, 쌀(21.3%) 사과(21.6%) 등이 상승하며 농산물 물가는 1.1% 상승함. 축산물과 수산물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5.3%, 5.9% 상승하면서, 전체 농축수산물 물가지수 상승폭에 영향을 미침.
 - (공업제품) 가공식품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.5% 상승함. 석유류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4.8% 상승
 - (개인서비스) 외식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.0% 상승하였으며, 외식을 제외한 개인서비스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.6% 상승
 - 한국은행은 국제유가 하락과 여행서비스 가격 둔화 전망을 고려할 때, 연말~연초에는 물가가 점차 안정될 것으로 예상함. 단, 환율과 유가 변동성이 여전히 높아 물가 경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며, 11월 경제전망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물가 경로를 제시할 예정임.

■ 2024~2025년 10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(전년 동월 대비) ■





세계 농업·농정 동향

● 일본 농림수산성 환경부하 저감 농산물 인증 취득 간소화 | 2025-10-27 농림수산성

- 일본 농림수산성은 ‘환경부하 저감 가시화 시스템’과 영농관리 애플리케이션을 연계하여 환경부하 저감 농산물 인증(미에루라벨) 취득 절차를 간소화함.
- 농림수산성은 농업인의 환경부하(온실가스 배출 등) 저감 노력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부하 저감 인증(미에루라벨) 제도를 운영 중임.
- (기준) 농업인이 직접 ‘간이 농산물 온실가스 배출 산정 시트(엑셀)’ 작성 후 농림수산성에 전자우편을 통해 보고하여 감축 기여율에 따라 인증 등급 획득
- (개편) 영농관리 앱에서 재배 데이터를 기반으로 온실가스 배출·흡수량을 자동 산정하고 결과를 ‘환경부하 저감 가시화 시스템’으로 전송하면, 인증 등급 및 등록번호 자동 부여
- (인증 기준) 감축률에 따라 별 1개(온실가스 배출 5% 감축), 별 2개(온실가스 배출 10% 감축), 별 3개(온실가스 배출 20% 이상 감축)의 인증 등급 부여
- (대상 품목) 쌀·채소·과일 등 23개 품목
- (기대 효과)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및 인증 신청 절차의 편의성 제고, 인증 등록번호 취득 절차 등 행정처리 시간 단축
- 농림수산성은 향후 영농관리 애플리케이션과 연계를 확대하여 농업인의 환경부하 저감 인증 취득의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임.
- ‘환경부하 저감 가시화 시스템’과 연계한 영농관리 애플리케이션은 JA전농의 경영체 지원 시스템으로 애플리케이션에 ‘탈탄소 가시화 관리 기능’을 추가하여 쌀·채소·과일 등 23개 품목 대상 인증 제공

| 일본 ‘환경부하 저감 농산물 인증 취득 간소화’ 주요 참여 주체 및 역할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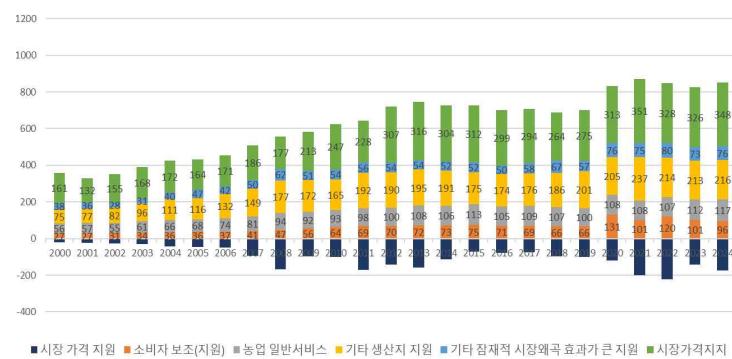
주체	역할
농업 생산자	• 재배데이터 입력 및 산정결과 활용 (등급·등록번호 즉시 발급)
영농관리 앱 사업자	• API 연계로 산정 서비스 제공 및 신규 기능 개발
농업연구기구 / WAGRI	• 산정 시스템 운영, 간이 산정 로직 제공, 데이터 검증·갱신
시장·소매	• 산정 데이터 반영된 농산물 유통
식품 제조기업	• Scope 3(공급망) 탄소배출 산정 반영
농림수산성	• 소비자 행동 변화 유도 및 제도 운영



● OECD, 농업·무역·환경 연계 강화 및 지원 구조 개편 측면 | 2025-10-30 OECD

- OECD는 54개국 농업정책을 분석한 2025년 보고서에서 지속가능한 식량안보를 위해 농업지원 방식 개선과 무역·환경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함.
 - 2022~2024년 평균 농업지원 규모는 약 8,420억 달러(USD) 수준으로 팬데믹 이전보다 증가했으나, 농업생산 대비 비중은 감소 추세임.
 - 생산자지원*이 전체의 약 74%를 차지하며, 이 중 시장가격지지** 등 왜곡 가능성이 높은 방식이 약 66%로 큰 비중을 차지함.
- *생산자지원(Producer Support Estimate, PSE)은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출과 소비자로부터 농민에게 이전되는 모든 형태의 지원을 화폐 가치로 계량화한 포괄적인 지표
- **시장가격지지(Market Price Support)는 국내 시장 가격이 국제(국경) 참조 가격보다 높게 형성될 때 발생하는 소비자 후생 저하를 금전적으로 계산한 지표임. 다만, 기호(preference)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가격 비교만으로 소비자 후생을 측정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.
 - 환경보호·동물복지·사회적 기준 이행을 조건으로 농가를 지원하는 비중은 약 5% 수준으로 개선 여지가 큼.
 - 농업지식 및 혁신 투자(AKIS) 비중은 전체의 22%이지만, 농업생산가치 대비 0.5% 수준으로 2000년(약 1%)의 절반 이하로 감소함.
- 생산자지원(PSE)비율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음.
 - 2022~2024년 기준, 호주(2.7%), 미국(7%), EU(16.4%), 일본(32%) 등 국가별 농업 정책과 시장 상황에 따라 차이가 존재함.
 - 한편, 인도·아르헨티나·베트남에서는 농업인 대상 순부정 지원*(-11~-15%)이 발생하고 있으며, 중국의 경우 2000년 5%에서 2024년 13%로 크게 확대됨.
 - * 순부정지원(negative support)은 정부 정책으로 인해 농가가 실질적으로 부담을 지는 상태를 의미하며, 지원금이나 가격 보조보다 가격통제·세금·규제 등으로 인한 소득 감소 효과가 더 큰 경우를 말함.
- 또한 농식품 무역이 생산보다 빠르게 확대되면서 환경규제와 무역 규범의 결합이 강화되는 추세임.
 - OECD 회원국 및 신흥국은 온실가스(GHG) 감축 정책 120개를 시행 중이며, 절반 정도는 수출 부문과 연계됨.
 - 탄소발자국 측정 도구 114개가 운영되는 등 농업 탄소 평가체계에 대한 국가·민간 차원의 대응이 확대되는 추세임.
- OECD는 왜곡형 보조 축소, 혁신 투자 확대, 환경기준 조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함.
 - 특히 한국은 높은 생산자 지원 비중을 고려해 환경·사회 성과 중심의 직불제 확대 및 지속가능 농식품 무역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평가됨.

| 농업 총지원 추이(USD 억 달러, %, 전체 국가) |





국내 농업·농정 동향

● 생활물가·외식물가 안정 및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강화 | 2025-11-04, 2025-11-03 관계부처 합동

- 정부는김장철을 앞두고 생활물가와 외식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, 농식품 공급 확대·할인 행사·유통 혁신 등 민생대책을 추진함.
 -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.4%, 채소류·가공식품·서비스 가격 중심 상승
 - 배추·무 4.7만 톤, 고추·마늘·양파·소금 등 약 5천 톤 공급 확대
 - 농축산물 최대 50% 할인행사(500억 원 규모) 및 온·오프라인 유통채널 활용
 - 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, 산지·소비자 물류센터 확충, 스마트양식 도입 등 유통·물류 효율화 추진
 - AI 기반 농산물 수급 예측 고도화 및 기후 대응형 공급관리 강화
- 아울러 외식물가 안정을 위해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슈링크플레이션 대응을 병행함.
 - 원재료비·인건비 부담 등 원가 요인 점검 및 합리적 가격정책 협조 요청
 - 공정위·식약처 중심의 슈링크플레이션 점검 및 제도 보완 추진(11월 발표 예정)
 - 업계는 할당관세 확대, 공공배달앱 활용, 가격·원가 정보 공개체계 개선 건의
- 정부는 생활물가 전반의 안정과 소비자 신뢰 제고를 목표로 단기 대응과 구조 개선을 병행 중임.
 - 수급 확대·할인 지원과 함께 디지털 기반 수급관리·유통 구조 혁신 추진
 - 김장철 품목뿐 아니라 외식·가공식품 등 전 소비 단계 가격·용량 투명성 강화로 시장 질서 확립

| 생활물가·외식물가 정부 주요 대응 |

품목	정부 대응
김장 수급 안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배추·무 4.7만 톤 공급• 고추·마늘·양파·소금 5천 톤 공급
할인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할인예산 500억 원• 최대 50% 할인 행사
유통·물류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온라인 수산물 도매시장 확대• 산지·소비자 물류센터 확충
디지털 기반 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AI 기반 수급예측모형 고도화• 기후 대응형 공급관리
외식물가 대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업계 간담회• 가격·원가 정보 공개 협의
슈링크플레이션 대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공정위·식약처 점검 및 제도 보완(11월 발표 예정)